

## 강원상품권 지급 확대 불만 취약 계층 무리한 정책 지적

속보=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의 '강원상품권' 확대 정책에 사회적 취약 계층이 대거 포함되자 불만(본보 지난 10일자 3면, 12일자 4면 보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춘천시와 영월군 등 지자체는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어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이나 청년고용촉진사업 등 일자리 지원시책에 따른 활동비 중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인과 저소득층 장기실업 청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운 구직 계층을 대거 포함시킨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춘천시 등도 최근 비슷한 사업 안내 광고를 냈다. 양 자치단체에 따르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서 구직 활동 시 월 30만원씩 3개월간 '강원상품권'을 지원 받는다. 지역기업 인재난 해소를 위한 구인기업 취업 성공 특별지원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직원 1인당 임금 수준별로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김평희·최나리기자

## “설계단계 도내 제품 우선 반영 경기 활성화”

### 건설분야 지역생산품 확대 간담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도내 기업 생산제품을 확대, 공급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해당 제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12일 강원도산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도건축사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 경제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지역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경제인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 토목 등 건설분야 설계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설계내용이 계약 또는 발주단계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당초 설계대로 발주, 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경제인들은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도 조달우수제품 수의 계약 확대 △여성기업 수의 계약 확대 △설계자가 도내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도내 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중 건축사회, 엔지니어링협회, 중소기업대표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기섭



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424.5조... 올보다 6% 증가

# SOC 18.7兆... 10년만에 최저

올해 SOC예산보다 15.5%나 줄어  
건설업계 '수주절벽' 현실화 우려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요구액이 10년 만에 최소 수준인 18조 7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요구 규모는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SOC를 비롯한 환경 및 산업, 문화, 농림 등 시설분야 예산만 급감하면서 건설업계의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요구 규모는 총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6.0%(23조90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예산 요구 규모는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 274조 7000억원 대비 7.2%(19조9000억원)나 늘었다. 기금 요구액 또한 129조9000억원으로 3.2%(4조원)가량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에서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SOC 요구액은 올해 예산 22조1000억원 대비 15.5%나 줄어든 18조7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요구액 20조원보다 6.5%(1조3000억원) 줄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스톡이 상당부분 축적됐다는 판단으로, 요구액 대부분도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 2008년(19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2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은 2009년 20조원을 넘어서 2010년 25조1000억원(추경 제외)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1~2012년 각각 24조4000억원과 23조1000억원으로 내림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렵사리 24조원 선에서 증감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다시 내려앉았고 올해 22조1000억원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요구액만 보면, SOC 예산의 축소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어 건설업계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SOC 예산을 연평균 6%씩 줄여도 내년까지는 20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



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단 SOC뿐 아니라, 여타 시설 사업 관련 예산도 줄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사업 완료 등의 여파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요구액이 올 예산 대비 5.0% 줄어든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하수도 시설사업 규모 조정 등에 따라 환경 분야 예산 요구액도 3.9% 줄어든 6조60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요구액

도 올 예산 대비 3.8% 감소한 1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도 19조3000억원으로 1.6% 줄어들었다.

이렇다 보니 내년 국내 건설시장은 극심한 수주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발주 공사물량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 지역 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d@



예산 아끼려고... 안전비용 줄인 水公

발주엔 일반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요율 1.88% 적용  
입찰 전 기타건설공사로 변경... 요율 0.94%로 낮춰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조성공사 3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둘러싼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산업 간 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보고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1.88%로 적용했다.

현장설명 때도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지만 수자원공사는 입찰 전 이 공사의 종류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고 산업안전관리비 요율도 0.94%로 조정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낮추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에서도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일반건설공사(갑) 1.88%였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입찰 두 달 전에 산업안전관

리비 요율을 0.94%로 낮춰 입찰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전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의 일방적인 조정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의 한 유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쟁의 최대 쟁점인 시화 MTV 조성공사 3공구의 공사 종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자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에서 일부 교량이나 도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교량·도로의 공사금액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공사로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보고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0.94%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교량이나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체의 50%를 넘지 않으면 부수적인 공사로서 보는 게 맞지만 교량·도로 등 일반건설공사

(갑)의 공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해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시화 MTV 3공구의 경우 단지조성을 제외한 교량 등의 공사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도 이 공사가 교량·도로공사 등 다른 공사와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절반을 웃돈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공사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보는 데 무게를 뒀다.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0.94%가 아닌 1.88%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가 더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볼모로 예산 절감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관리비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법정 요율에 따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입찰공고 이후

에 일방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낮춰 통보하는가 하면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상황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업안전관리비를 부담하게 삭감하면서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적게 지급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야말로 적폐”라면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비의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J노믹스’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 건설업계도 힘 합친다

건협, 적정공사비·노후인프라 개선 등 일자리 방안  
文정부 국정기획자문위·일자리위원회 찾아 제안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이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건설업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제 확대,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건설업계의 난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오후 유주현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2분과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 중인 대한상공회의소에도 일자리 창출방안을 이날 제출했다.

건협은 건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방안으로 △세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직접시공 의무제 확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세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을 위해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찰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00억~300억원의 중소

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표준시장단가 적용시엔 낙찰률 적용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공사비 부담감각 이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을 건의했다. 입찰제도에선 적격심사제 및 중립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조정과 기술형 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협상가격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을 위해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도 다시 손바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5년마다 노후시설 조사·평가 및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직접시공 의무제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수주 억제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적용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건협은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 및 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협은 신규 건설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요구했다. 새 정부는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

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공간 제한,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장비 투입으로 인한 공기단축이 제한적이다. 특히 연장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 잦은 작업 중단으로 시공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협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1~6년 후 시행이라는 단계적 도입을 주문했다.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이라며 “건설산업의 4대 일자리 창출방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뉴스 돋보기 내년 SOC예산 요구액 18.7조

## 지역개발·균형발전 공약 실천 턱없이 부족 文정부 최우선 과제 일자리 확충에도 역행

각 부처의 SOC 및 시설사업 예산 요구액이 급감하면서 정부의 재정투자를 기초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확충 공약에도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

12일 업계 및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지역공약은 무려 14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과 지역숙원사업 등 SOC 관련 사업이 약 3분의2에 달하고 예상투자 규모는 최소 7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 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수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 부처가 내놓은 SOC 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보다도 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역공약을 실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SOC 축소기조는 예상했지만, 부처들의 요구액이 이렇게까지 급감할 줄은 미처 생각치 못했다”며 “새 정부가 첫 해부터 이렇듯 SOC 투자를 줄인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자체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요구액만 보면 지자체가 올린 SOC 등 시설사업 예산이 정부안에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 검토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오는 2020년까지 최소 22조2000억원에서 최대 47조2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 바 있다.

또 한국건설경영협회도 앞서 새 정부 및 국회 등에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며 건의서를 제출해 둔 상태다.

SOC 및 시설사업 예산 요구액 감소는 새 정부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제약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190만명에서 200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올 추경안에도 SOC가 배제된 데 이어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까지 급격히 줄인다면, 건설업계에서만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박수진 건설연 연구위원은 “고용창출과 국민복지 증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SOC 투자를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과 개량에 초점을 맞춰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과 개량계획 수립, 자원 조달 등 통합프로세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